

동북공정의 정치적 논란에 비판적 해석

이희옥*

- I. 문제제기
- II. 경과: 하나의 '공정' 과 두 개의 파동의 경과
- III. 정치적 쟁점: 역사와 현실
- IV. 평가: 사실과 해석
- IV. 결론: 비판의 방식

이 글은 최근 국내에서 중국의 동북공정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해석하기 위한 하나의 시각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 사회에 형성된 '중국위협'의 이미지와 실체(substance)를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동북공정에 투사하는 경향, 학술과 정치의 문제를 과도하게 단순화하는 현상, 중국의 정치적 의도에 대한 단순하고 자의적 해석을 검토하면서 오해가 오판을 낫는 구조를 극복하고자 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한중관계를 어렵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이론적, 정책적 제언을 부가하였다. 첫째, 우선 중국의 고구려사, 발해사에 대한 중국의 역사인식 빈곤을 문제 삼아야 한다. 둘째, 구체적으로는 중국 교육부에서 제정한 교과서 서술지침인 <역사과정표준>을 바꾸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영토와 역사문제를 분리해 보는 방법이다. 넷째, 우리 내부에 과도하게 내면화된 민족주의를 풀어내고 역사연구의 조건을 혁신하는 일이다. 다섯째, 연구담론을 동아시아 지평으로 확장하는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힘의 결절점이라는 중국 동북지역에 착안하는 일이다.

주제어: 동북공정, 한중관계, 동북진흥, 고구려사, 간도문제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I. 문제제기

2002년부터 2007년 2월로 종료된 중국의 동북공정¹⁾은 한국 내에서 한중관계 발전의 한계를 드러내 주었고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부정적 여론을 불러 일으켰다. 더구나 동북공정이 지닌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한중간 외교갈등이 나타났고 언론의 보도태도에 따라 이러한 갈등이 보다 증폭되고 정치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한국언론이 동북공정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시점은 고구려사 왜곡이 본격화되던 시기인 2004년이였다.²⁾ 이것은 한국내 민족주의의 열기를 고조시켰고 노무현정부도 이러한 대중의 여론을 수용하면서 역사와 학술문제는 한중간 외교문제로 비화되었다. 그러나 2006년 9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북핵위기 국면에서 한중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동북공정 이슈는 수면하로 잠복하였다. 그리고 다시 동북공정 문제가 한중 외교현안으로 등장한 것은 2006년 연구 결과물이 출판되면서 부터였다. 이 시기의 주된 쟁점은 2004년 양국간 외교합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역사왜곡’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면 동북공정은 한국언론의 보도 → 한국내 민족주의 여론의 환기 → 한국정치권의 자의적 해석과 수용 → 외교문제화 →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이라는 경로를 밟아왔다. 이러한 과정은 중국이 동북지역에 존재한 고대역사에 대한 인식을 거두지 않는 한³⁾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양국 사이의 호감

1) 동북공정의 논리와 추진체계, 경과에 대한 자세한 개괄은 (이희옥 2005c) 동북공정이 한중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Lee 2005, 239-264; Lee 2006, 82-100)참고.

2) 중앙일보의 첫 보도는 고구려사 유적이 분포된 지역의 유적관리비용과 건설비용을 포함하여 5년간 약 200억 원(3조원) 이라고 보도하면서 고구려사 왜곡에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 것으로 과대해석하기도 했다. (『중앙일보』 03/07/14)

도도 출렁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양국간 역사분쟁이 발생하면 한중관계는 새로운 도전을 야기하는 한편, 한중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역사문제가 정치화되어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부상과 군사대국화, 북한 급변사태와 맞물리면서 중국의 한반도 북부경영에 대한 우려,⁴⁾ '역사전쟁'(윤명철 2004), 한국판 '중국위협론'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역사문제로 인해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는 부정적으로 반전하였다.⁵⁾ 이것은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중협력, 연간 1천억 달러를 넘어서 한중교역규모 그리고 폭발적인 민간교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의 역사적·문화적 신뢰기반은 여전히 취약할 뿐 아니라, 한중관계의 기저를 흔들 수 있는 걸림돌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⁶⁾ 심

3) 이와 관련하여 일부 연구자들은 중앙에서의 동북공정이 종료되면서 지방 수준에서 본격적으로 동북공정의 결과물을 출판하면서 역사왜곡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동북지역, 특히 지린성 사회과학원에서 발행하는 고려사를 포함한 중국지방사의 연구성과를 담은 『東北史地』를 통해 이 문제를 이어가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출간된 고대사 관련 서적이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이라는 데에서 출발하여 '동북지역의 고대사가 중국사'라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중앙에서의 '학술기획'과는 달리 상당히 주변화되었고 하나의 동일한 역사인식에 기초하여 질서 있게 역사를 수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동북사지 관련 역사연구자와 동북공정 참여자 인터뷰 연구원, 비서장 (서울07/07/01)

4) 북중관계의 변화와 북한급변사태에 대한 중국의 태도 등을 다룬 르브생 페이퍼로 다음을 참조. (International Crisis Group 2006)

5) KBS와 미디어 리서치 공동조사(조사시점 2004.9.8)에 의하면 중국에 대한 호감도(40%)에 비해 비호감도(58.2%)가 보다 높다. 중국관련 전국민 여론조사(미디어 리서치 2004, 12;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조사결과(조사시점 04/09/16-18)도 남한정부의 대중국외교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광범위하며 전반적으로 부적절한 외교'(38.3%) 또는 '실리 없이 중국에 끌려가는 저자세 외교'(32.6%) 등 '부적절하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70.9%로 높은 반면 '실리 위주로 매우 적절한 외교'(3.2%) 또는 '일부 미흡하나, 전반적으로 적절한 외교'(23.2%) 등 '적절하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26.4%에 머무르고 있다. 2006년 2차 파동이후에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동아시아연구원(EAI) 여론조사(『중앙일보』 06/12/13) 또한 한국인의 89% 이상이 중국의 군사대국화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여론조사도 있다. 이것은 퓨 리서치 센터가 2002-2007년 47개국 4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미국의 66%, 일본의 80%보다 높은 수치이다. (『중앙일보』 07/06/29)

6) 2006년 말 기준 한중교역규모는 한국측 1180억 달러(중국측 1343억 달러), 연간 방

지어 '중국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한-미-일의 가치동맹(value alliance)을 강화하여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위험분산전략(hedging strategy)을 제기하기도 하고,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남북문제의 중심성(centrality)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한중 양국이 역사문제를 슬기롭게 처리하지 않는 한, '동아시아 공동의 집'은 물론이고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한중관계의 미래도 불투명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역사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과거의 기억이 내면화되어 쉽게 정치화될 수 있는 구조가 구축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이희옥 2004a, 341-366; 李熙玉 2006, 6-10).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 동북공정에 대한 민족주의적 열기에 편승하는 동안, 사려 깊은 분석을 통해 역사의식을 고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추구하면서 세련된 공론의 장을 구축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것은 비대칭적 한중관계의 현실에 기초할 때, 정책의 유연성을 제약할 뿐 아니라 우리 내부를 성찰적으로 들여다 볼 기회를 박탈해 버릴 위험성도 있다.

따라서 중국의 동북공정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는 한편 과도한 일반화(hasty generalization)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즉 중국의 동북공정이 한국고대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그것이 한중관계를 어렵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중국이 동북공정을 접근하는 시각과 이에 대한 외부해석 사이의 간격을 좁혀갈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사회에 형성된 '중국위협'

문인원은 48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수치는 각각 한국 관세청, 중국해관, 중국국가여유국 통계에 기초한 것이다.

의 이미지와 실체(substance)를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동북공정에 투사하는 경향, 학술과 정치의 문제를 과도하게 단순화하는 현상, 중국의 정치적 의도에 대한 단순하고 자의적 해석에 의해 오해가 오판을 낚는 구조를 극복해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한중관계 발전의 맥락에서 동북공정의 정치적 논란을 해석하는 하나의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우리사회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동북공정 파동의 ‘정치적’ 성격을 분석하고 있다. 3장에서는 동북공정을 추진했던 중국의 정치경제적 논리와 의도를 분석하고 있다. 이것은 고도로 기획된 ‘역사문제’라는 시각을 단순성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4장에서는 동북공정을 바라보는 한국내의 시각을 사실과 해석사이에서의 긴장관계를 드러내고 합리적인 수단을 발견하면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데까지 나아가고자 했다. 그러나 이 글은 동북공정의 정치적 논란과 이에 대한 하나의 시각을 제기하고자 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둘러싼 논의는 필자의 능력 밖의 일이다. 또한 한중양국,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policy making process)을 다루지 않아 구체적인 작동원리를 파악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II. 경과: 하나의 ‘공정’과 두 개의 파동의 경과

2002년 시작한 ‘동북공정’ 사업이 2007년 2월에 종료되면서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변강사지(borderland history and geography) 연구소가 수행했던 고구려사, 발해사를 비롯한 한국고대사 연구 성과물들이 출간되고 있다.⁷⁾ 이러한 동북공정을 둘러싼 한국 내 두

차례의 파동을 편의상 2004년에 벌어진 것을 ‘제1차 동북공정’이라고 하고 2006년 이후 한국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건을 ‘제2차 동북공정’이라고 부르고자 한다.⁸⁾

제1차 동북공정은 2002년 중국에서 한국고대사 왜곡을 위한 프로젝트의 내용 중에서 "고구려사는 중국사의 일부이고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光明日報』2004.6.24; *China Daily* June 24, 2004) 이라는 견해가 알려지면서 한국학계와 시민사회를 격분시켰다. 이것은 2003년 7월 이후 동북공정에 대한 현황이 보도된 이후 사태의 추이를 주목하고 있던 여론을 증폭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것은 역사문제를 민족주체성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론과 북핵문제 등 한중협력관계를 고려하여 조용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고민하던 한국정부의 정책도 원칙론으로 변경시켰고, 이 문제는 첨예한 외교문제로 비화되었다.

그 결과 2004년 3월에는 정부가 출연한 <고구려연구재단>이 출범했고 외교문제로 비화된 한중간 견해차는 중국의 고위급 인사(중국정치협상회의 주석 자칭린,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등)의 방문을 계기로 2004년 8월 23일, 5개항의 구두합의를 통해 일단락되

7) 연구결과의 출판물은 역사관계 보고서는 공개, 비공개 형태로 출판될 예정이지만,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보고서는 비공개로 출판하거나 출판자체를 보류할 가능성이 있다. 동북공정 참여자 Z 연구원 인터뷰 (서울: 07. 7.1) 이미 그가 참여한 번역보고서는 2005년 공개출판사 없이 내부자료, 비밀유의(注意保密) 형태로 출간된 바 있다. 그러나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도 국가적 차원의 11차 5개년계획(2006-2010)사업의 일환으로 동북공정을 지속하고 있으나 이 글의 연구범위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8) 2006년 11월 중국사회과학원의 변강사지연구소가 펴낸 5권의 연구 성과물에는 한국 학계가 인정하지 않는 기차 조선을 등장시켰고, 발해에 대해선 중국 지방 정권의 하나라고 분석했으며, 한강 유역까지 고대 중국의 영토였다는 연구도 있었다. 이에 대해 고조선에서 발해에 이르는 한국 고대사 전체를 중국의 역사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하였다. 중국 측에서는 외교부 성명을 통해 "중국 사회과학원은 학술기구이다. 학자들이 학술문제에 대해 어떤 관점을 발표했는지는 잘 모른다"고 비켜갔다. SBS 8시뉴스(06/09/05)보도

었다. 즉 “① 고구려사 문제에 대해 양국간 중대현안문제로 대두된 것에 대해 중국이 유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 ② 양국은 역사 문제로 인해 한중간 우호협력관계 손상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1992년 8월 한중수교성명, 2003년 7월 양국정상간 공동성명에 따라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③ 양측은 한중 협력 관계라는 큰 틀 안에서 고구려사 문제 공정한 해결을 도모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해 고구려사 문제가 ‘정치화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④ 중국 측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고구려사 관련 기술에 대한 한국 측에 관심에 이해를 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감으로써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⑤ 양측은 학술교류의 조속 개최를 위해 노력하며, 학술교류가 양국 국민의 우애와 이해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한겨레신문』 04/08/25)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는 ‘구두합의’라는 것의 모호성만큼이나 양국의 실리와 명분을 동시에 고려한 것이지만, 역사문제에 대한 근본적 문제해결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양국간 동북공정을 보는 인식, 해결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견해차이가 뚜렷했기 때문이었다. 중국은 비록 공식적으로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았으나 한국측의 강경한 대응을 ‘감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당시 한국정부의 대응을 북핵문제와 탈북자문제 그리고 김선일 씨 피살사건 등과 같은 국내문제를 대외적 민족주의 열기로 돌리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다.⁹⁾ 한편 한국은 동북공정의 의도가 북핵 이후의 미려한반도에 대한 정교한 구상이라고 보지는 않았으나 한국내의 민족주의적 열기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이를 활용하려는

9) 장웨이웨이는 군부의 한국연구자를 양성하는 뤼양외국어대학 교원이다. 특히 한국 학계의 조공-책봉의 이해부족, 동북공정의 의도에 대한 오해, 역사에 대한 과도한 현대적 해석을 비판하였다. (張威威, 2004)

정치적 결정을 한 것으로 보였다. 이처럼 동북공정을 둘러싼 인식 차이는 근본적으로는 역사관이나 역사서술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근본적 문제해결은 양국간의 정치적 부담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중국정부가 부분적으로 한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역사해석에 정치적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는 내부의 절충안을 마련함으로써 동북공정사업 자체는 유지하고자 했다. 당시 중국당정이 ‘동북공정’ 자체를 중단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한국고대사 관련 해석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라는 지침을 내리지 않았고 이럴 의도와 가능성도 없었다. 따라서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재현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두 번째 갈등은 2006년에 나타났다. 이 시기는 형식적으로 초기 동북공정의 책임자들이 바뀌었고¹⁰⁾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수행했던 고구려사, 발해사를 비롯한 한국 고대사의 연구결과들이 중국 사회과학원 변강사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출간물을 통해 소개된 때이다. 이를 두고 한국언론은 중국이 2004년의 구두합의를 무시하고 역사왜곡을 진행하고 있다는 근거로 해석하였다. 더구나 중국이 ‘민족의 영산’ 백두산에서 아시안게임의 성화를 채화한다거나 스키장을 건설하고 심지어 백두산 인삼개발까지 개발한다는 보도를 내 보내기도 했다.¹¹⁾ 여기에 공교롭게도 한국고대사를 다룬 드라마들

10) 동북공정의 영도소조의 조장을 형식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회과학원 부원장이 왕 루어린에서 추안자꾸이(傅佳貴)로 변경되었으며, 일부 전문가위원회도 보충되고 변경되었다.

11) 엄밀한 의미에서 2004년에 전개된 역사분쟁이 새로운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일부 신문과 방송의 특종경쟁 과정에서 보다 자극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증폭하거나 유추하면서 세련된 담론을 형성하지는 못했다. 예컨대 인삼공정의 경우 ‘공정’이라는 말이 없을 뿐 아니라, 지린성 정부가 백두산 일대에서 생산되는 인삼을 ‘창바이 산 인삼’이라는 품질증명 상표로 등록시키고 인삼 재배 및 생산의 규격화와 표준화를 꾀하면서 “창바이 산 인삼을 3~5년 안에 세계 최고급 브랜드로 육성하는 동시에 인삼재배를 지린 성의 핵심 산업으로 삼을 계획”에 대한 한국 언론의 비판이었다. (『동아일보』/06/08/01)

이 한꺼번에 한국의 방송에 등장하면서 중국도 한국의 고구려 열풍에 우려를 제기하는 등 역사갈등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2005년 10월 연변교육출판사의『세계역사』9학년 책에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내용이 삭제되었다고 보도하기도 했고¹²⁾ 한국고대사를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아예 삭제하고 있다는 과도한 주장을 내보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역사단체와 국학단체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패권주의를 비판하는 시위를 연일 벌이면서 이를 계기로 중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교정을 촉구하였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합의로 <고구려사 왜곡 및 역사 편입 시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그 결과 당시 여야의 정치적 대립 속에서도 2006년 8월, 고구려연구재단을 흡수하여 재조직한 <동북아역사재단>을 출범시킬 수 있었다.¹³⁾

한국의 일부 학계에서는 중국의 역사왜곡 작업은 이미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에서 지린성사회과학원으로 연구주체를 옮겨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껍데기뿐인 동북공정이 끝난다고 해서 역사왜곡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07/01/26)

이러한 비등한 한국의 여론에 따라 2006년 9월 10일 핀란드의 아셈회의에 참석 중이던 노무현 대통령은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만나 동북공정의 결과물의 출판에 따른 새로운 전개과정에

12)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2003년에 이미 한국관련 내용이 삭제된 인민교육출판사의『세계역사』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에 불과하다.

13) 동북아 역사재단의 연구범위는 중국사 뿐 아니라, 일본사를 망라하고 있으며, 연구의 범위도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고 있다. 과거 고구려사재단에서 다루었던 주제는 주로 제2연구실로 옮겨 왔다. 예산규모도 늘어났고, 연구범위와 활동영역은 보다 포괄적인 동북아시아 맥락에서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동북아역사재단의 홈페이지(www.historyfoundation.or.kr) 참조.

문제를 제기하고 유감을 표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0월 13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북한핵실험에 가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못했으나 고구려사 문제를 의제에 올려 논의하였다(『한겨레신문』 06/10/13).

그러나 한국의 격렬한 반응과는 달리 중국은 냉정할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왔다. 원자바오 총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언론에서는 이러한 사실 자체를 보도하지 않았으며, 2007년 한중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제시되지도 않았다. 이것은 2004년 구두합의사항을 넘어서는 새로운 역사적 해법에 합의하기 어렵다는 것과 동북공정에 대한 합의가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미봉적인 성격이라는 점을 반증해 주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역사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본인식 속에서 ‘조용하게 처리하고 문제를 확대하지 않는다(冷處理, 不要抄熱)’는 소극적인 대책을 취해왔다.

그러나 동북공정과 고구려사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중국의 인식과 정책을 부분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사실이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서남지역, 서북지역에서의 지역개발과 역사연구의 일환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동북공정의 정치적 민감성을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못했으나 역사 갈등이 한중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정치적 학습을 하게 되었다. 실제로 한국이 시정을 요구하는 사례에 대해 중국정부가 개입하여 몇 가지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면서 정치적인 배려를 하기도 했다.¹⁴⁾ 그리고 2006년 역사문

14) 이른바 제1차 동북공정 파동을 계기로 한국 측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중국의 시정조치는 다음과 같다. 즉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왜곡기술 전면삭제(2004년 8월), 중국의 역사교과서를 제작하는 중국 인민교육출판사 홈페이지 왜곡기술 전면삭제(2004년 9월), 신화사 홈페이지 ‘중국의 문화유산’란 소개부분 삭제(2005년 1월), 신화사 인터넷판 게재 왜곡기사 삭제(2005년 7월), 환인사 소재 홀본성(오녀산성)

제가 재발하자 2004년 당시의 태도와는 달리 중국당정은 신속하게 한국정부와 시민사회의 논리를 다각도로 수집하고 합리적 대응을 준비하기도 했다.¹⁵⁾ 이것은 미래 한중관계를 고려할 때, 역사 갈등의 확산이 당면한 중국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내부적으로는 쟁점이 되는 것은 남겨놓고 공동으로 연구하자(擱置爭議 共同研究)는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나 학계의 연구를 추진하거나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임과 동시에 학술문제를 정치문제로 확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동시에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두 차례의 동북공정 파동은 한중관계 저변을 흔들 수 있는 휘발성이 강한 이슈라는 것을 확인했으나, 그 관계의 기반을 흔들고 있는 문제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수반된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동북공정에 대한 우리사회의 비판은 과도한 민족주의적 정서에 기대고 있었고, 중국의 복잡하고 타산적(calculative) 의도를 지나치게 단순한 잣대로 재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무엇보다 동북공정과 고구려사 문제를 ‘의도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동북공정이 고구려사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포함하고 있

관련 중국언론(대련일보, 강서TV) 인터넷 왜곡삭제(2005년 8월), 신화사 홈페이지 '중국의 문화유산'란 왜곡 삭제'(2005년 8월), 용담산성 왜곡 안내간판 일부 철거(2005년 8월)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2005년 11월 후진타오의 국빈방문을 앞두고 소개한 신화통신과 인민일보의 '한국개황'란에는 과거와는 달리 고구려사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즉 "서기 1세기 이후 한반도는 고구려, 신라, 백제 세 개의 고대국가를 형성하였다. 서기 7세기 중엽 신라가 반도에서 통치지위를 차지했고, 10세기 초 고려가 신라를 대체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응하는 성과의 하나는 고구려연구재단과 중국 사회과학원 변강센터와의 학술교류창구를 개설하여 역사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춘 것이다.

- 15) 중앙당교 등에서는 한국측의 논리를 다각도로 수집하고 국내외 전문가회의를 소집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북한핵실험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이 논의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중앙당교 관련당사자 W 인터뷰(베이징: 07/09/20)

고 이를 통해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보는 입장이 전면적으로 등장했으나, 이것은 1980년대 말 이후 중국에서 이루어진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보는 관점이 동북공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드러났던 측면이 있다. 또한 통일적 다민족국가론(中華民族多元一體)이 역사패권주의나 대(大)한족주의의 측면을 가지고 있고 동북공정도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접경지역에 모국을 지니고 있는 소수민족(조선족)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한반도 북부를 경영해 본 적이 없는 한족의 역사적 경험 때문에 동북변경에서 예견되는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수동적 측면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III. 정치적 쟁점: 역사와 현실¹⁶⁾

1. 국가대전략의 맥락

동북공정을 추진한 정치적 배경을 분석할 때, 일반적으로 동북공정의 연구목적으로 설정한 이른바 ‘다섯 가지의 의식강화’에서 찾고 있다. 즉 중국의 장기적 전략과 관련하여 동북공정의 직접적인 목표로 국가의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점, 국가통일·민족단결·변경안정의 목표에서 출발하는 정치의식이라고 강조한 점, 동북변경이 중국 변경의 일부이며 통일된 다민족국가에서 분리될 수 없

16) 제3장의 문제의식은 (이희옥 2005c, 97-110)의 문제의식을 축소, 보완한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중국의 의도를 설명하기 보다는 쟁점의 차이를 주요하게 드러내고 정책적, 학문적 진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다는 것이다.(金哲洙 2003, 8-9) 이런 점에 기초하여 동북공정이 세계전략과 동북아 전략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동북공정이 고도로 기획된 정치프로젝트라는 해석은 중앙정부의 조직적 비준과 막대한 예산지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사해석의 관점통일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물론 동북공정은 동북아의 상황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나, 이것을 곧바로 중화패권을 추구하려는 장기적 포석의 일환으로 간주하는 논리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와 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세계적 차원에서 에너지 부족과 식량위기, 사회경제적 모순, 2020년 1인당 GDP가 3000달러를 목표로 하는 국력의 한계 등 ‘제국’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이희옥 2005a; 이희옥 2005b, 75-109). 이처럼 동북공정을 추진할 당시 중국의 국가전략은 소강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대내적 사회경제발전에 주력했고 전세계적 수준에서의 군사투사력의 한계(global military reach)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외부환경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중국은 여전히 ‘힘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의 도광양晦(韜光養晦) 전략을 추구해 왔고 대외환경에서도 협력적인 자세를 취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해왔다.(Peng 2004, 64)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일초다강 질서에 순응하고 대미협력을 강조하지만, 동북아에서도 수동적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차원에서는 패권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견해는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나 패권추구가 곧바로 동북공정의 전략적 배경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왜냐하면 북한체제의 안정과 한반도에서의 현상유지가 가장 핵심적인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점에서 정교한 역사왜곡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지배

력 강화와 통일한국의 영토문제에 대한 역사적 정지작업이라는 도식은 단순하기 때문이다.(Lee,2006)

다만 국제화와 정보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자신의 전략적 목표를 숨길 수 없게 되었고, 중국정부도 비공식적·불완전한 정보나 의도가 비공식적 전달경로를 통해 전파되는 것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상황을 은폐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중국의 부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평화적 수단을 강조한 ‘평화부상론(peaceful rise)’¹⁷⁾과 대국의 책임을 강조하는 ‘책임대국론(Great responsible state)’(Evan & Fravel 2003, 22-35)을 통해 이를 수정하였다. ‘평화적 부상’은 중국의 기존질서를 타파하지 않으면서 주변국가의 평화와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고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을 확보하면서 ‘부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은 동북아 지역강대국으로 인정받는 것이 선행적인 목표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책임 지역안보협력과 다자간 틀의 형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제4세대 지도부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조화를 강조하는 한편 국제문제에서도 조화세계를 추구하고 있다.(Kim & Lee 2003, 110)¹⁸⁾ 그러나 중국의 강국화 전략은 팽창적, 패권적 의도를 담고 있기 보다는 제2차대전 이후 완결된 영토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의 행위준칙을 수용하는 한편 방어적 현실주의 입장을 견지한다고 볼 수 있다(Zacher 2001, 215-250). 이것은 중국이 다른 국가와 함께 미국의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한편 중국 자신도 일종의 행동의 제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후진타

17) 이후 평화부상론은 평화발전론으로 변화되었다. 이 변화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한 측면이 강하다. (Shutter 2005, 268-271), 이 양자관계에 대해서는 평화부상의 새로운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배준, 2007).

18) 서구에서는 이러한 후진타오의 노선을 제국주의적 특성을 띤 ‘새로운 독트린’이라고 평가하면서 중국위협론의 불씨를 되살리려고 한다는 시각도 있다(Christian Science Monitor 04/02/24)

오시기의 발전전략은 자본주의적 근대기획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면서 사회주의 정체성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위해 사회주의 조화사회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보수주의 사조와 애국주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결합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대중의 민족주의가 결합하면서 애국민족주의라는 틀을 통해 사회주의의 공백을 메우는 한편 체제통합의 기제로 등장하였다(Chang 2002, 179).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박람회를 앞두고 ‘중국위협론’을 불식하는 한편 과도한 민족주의 열기를 관리하면서 미국과의 협력체제(concert system)에 기초한 국가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보다 분명해 보인다.¹⁹⁾

이처럼 중국은 변경현상을 타파하기 보다는 변경지역의 안정적 관리를 보다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실제 1990년대 초, 중국이 변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도 소련의 붕괴에 따른 중앙아시아에서 대이슬람주의가 확대되고 이것이 신장-위구르지역에 영향을 주는 상황 때문이었다. 당시 중국은 천안문사건의 여파로 외부환경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안정은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였다. 이후 남서부 윈난지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베트남과의 국경분쟁은 물론이고 마약의 국제유통과 낙후지역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의 사회문제로 인해 사회적 안정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중국의 전통적인 민족정책은 자치에 강제와 강압정책이 적용된

19) 썸보(Shambaugh)에 의하면, 미중관계의 미래모델을 제시하면서 과거 조공체제와 같은 중국패권의 가능성은 없을 뿐 아니라, 강대국협력모델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미국이 축을 형성하고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 부채살을 형성하는 체제(hub and spoke)모델이나 규범적 공동체모델(normative community),복합적 상호의존(complex interdependence) 등이 보다 적실성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Shambaugh 2006, 12-20)

민족이 있었으나, 기본적으로는 자율성의 부여와 동화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인구성장률에 따라 소수민족이 자연적으로 한족에 동화될 수 있는 구조에 따른 느슨한 정책이었고, 실제로 청을 지배했던 만주족 등은 이미 자신의 문화와 언어를 잃고 한족에 동화되었다.²⁰⁾ 그러나 소수민족문제는 국경의 안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비록 전인구의 8% 수준에 불과하지만 전국토의 60%를 차지하는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대부분 변경지역에 밀집해 있다. 그 과정에서 조직적 치안사건의 발생빈도가 높고 이것은 중국의 체제정체성과 지역 내 안정을 위협하는 주요한 변수가 되었다. 더구나 중국의 동남연해 중심의 개발전략은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지역간 차이, 계층간 차이라는 3대격차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불균형 성장에 기초한 중국의 발전전략은 상대적으로 변경과 내륙지역의 낙후문제를 더욱더 악화시켰고 이에 따른 사회적 불만도 확대되었으며 동북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러한 소수민족 거주지의 불안정성은 ‘안정이 모든 것을 압도한다’는 중국의 정책목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고 보다 적극적으로 소수민족의 중국정체성을 부여하는 방식을 찾고자 하였다.

2. 동북지역 정체성의 차원

‘계획경제의 마지막 보루’로 불리는 중국의 동북지역은 사회주의 경제의 모순을 그대로 안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당과 흉노, 송과 요금, 원의 지배, 명과 여진, 청의 지배 등 항상 전쟁의 소용돌이에

20) “동북 각 민족의 흐름과 방향은 그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건 결국은 최종적으로 하나로 모여들어 하나의 통일된 중화민족을 형성한다. 이러한 발전추세로 볼 때, 장래에는 결국은 하나의 통일된 중화민족이 될 것이다”는 견해가 이를 대변한다(孫進己 임동석 역 1992, 457-459).

휘말리는 등 전통적으로 북방은 민감한 지역이었다. 더구나 이민족(移民族)의 본토화 문제는 동북지역의 오랜 문제였다(邴正 2003, 142-146). 이런 점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건설 이후 동북지역은 서부지역이나 남서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경이 안정되어 있었고 따라서 변경문제와 관한 한, 중앙의 정책적 관심을 끌지 못했다. 따라서 동북지역에 대한 역사연구는 정치적 의미의 변강 연구보다는²¹⁾ 주로 동북 지방사 또는 역사의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실제로 1980년대 이후 중국 학술계에서 고구려사 편입시도가 있었다.²²⁾ 당시 연구주제는 19세기 이후 조선인의 이민, 국경 변화, 고구려사, 발해사 등이었으나, 지방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갈등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중국정부가 동북공정이 학술적 문제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동북지역 역사연구의 이러한 과정을 반영하고 추인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방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 중 러시아나 내몽고와의 국경선에 대한 민감성이 하락한 반면 고국을 가진 조선족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한반도 변경이 새로운 민감지역으로 대두하였다. 즉 “한반도 통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고려민족주의(大高麗民族主義)사조가 출현하고 있으며, 한국이 무역, 선교, 역사유적지 고찰 등의 교류방식을 통해 중국 동북지역의 조선족 지역에 침

21) 중국에서 변강은 정치·지리적 개념으로 사용된다. 변강은 육지 국경과 해양 국경 내부의 일정을 지역, 다시 말해 다른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데 중국에서의 육지 변강은 헤이룽장(黑龍江), 지린(吉林), 랴오닝(遼寧), 간쑤(甘肅), 윈난(雲南), 네이멍구(內蒙古), 신장(新疆), 시짱(西藏), 광시(廣西) 등이다. 그러나 변강 연구는 단순히 변강 지역의 제 문제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대외관계 혹은 내부의 정치적 문제와 모종의 관련성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22) 예컨대 『東北歷代疆域史』, 『東北地方史研究』, 『東北民族源流』, 『東北民族史新編』, 『東北歷史地理』 등이다. 1985년에는 북한의 『조선전사』가 번역되어 중국 측 입장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990년대에 보다 빠른 속도로 고구려사를 중국 사에 편입하고자 하는 시도와 흐름들이 나타났다(신형식 2003, 1-3).

투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다”(中國社會科學院學術委員會編 2003, 166)는 인식이 그것이다.

따라서 중국정부로서는 이러한 동북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조치가 필요했다. 하나는 새롭게 등장하게 될 동북지역 국경에 대한 예방적 연구이고 또 하나는 ‘동북진흥’을 통해 낙후된 동북경제를 재건함으로서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역간 격차를 해소함으로서 지역안정을 도모하는 것이었다.²³⁾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의도는 서로 맞물려 있었다. 즉 장쩌민 시기 서부 대개발을 추진하면서 서북 변경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듯이 동북진흥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사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역사연구를 진행하고자 했다. 2003년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동북지역에 약 100여개의 개발프로젝트에 610억 위안(한화 약 9조원)을 투입하는 한편 국무원 내에 동북개발 사무실을 설치하였다(寧一外 2004). 특히 동북지역은 제4세대 지도부인 후진타오 정부의 야심적인 정책으로 동북아경제권의 새로운 핵심지역으로 등장했다. 이미 국경을 따라 연결된 1380km에 이르는 동부변경철도를 건설하고 있는 데, 이곳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길목일 뿐 아니라, 신의주에 접해있는 단둥(丹東)지역을 랴오닝성의 핵심거점의 하나로 개발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²⁴⁾ 특히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이 지역의 지리적 중요성은 크게 부각되었다.

이 과정에서 동북지역에 대한 영토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조선족의 중국정체성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일은 중요한 과제였다. 특히 동북진흥계획은 근본적으로 한반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의 경제 사업이고,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늘어나고 동북3성의 경제거

23) 동북지역 발전여건과 동북진흥정책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동북진흥정책의 중간평가에 대해서는 (정환우 2006, 395-397)

24) 취엔테신(全鐵新)시장과의 인터뷰 (2004 0.8. 24 단둥)

점이 공고화될수록 동북지역에 집중적으로 편재되어 있는 조선족의 정체성 문제가 나타나게 될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이것은 견고하던 동북지역의 국경을 약화시키게 될 뿐 아니라, 영토분쟁이 나타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게 만들었다.²⁵⁾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전력부족에 직면한 동부 연안지역의 산업을 동북지역으로 유인하는 한편 동북3성 지역에 한족의 이주를 장려하여 잡거(雜居)정책을 가속화함으로써 지역분리 경향과 소수민족의 문제를 결합하여 위협을 예방하고자 했다. 실제로 동북지역의 조선족은 호구문제의 유연화, 단위체제의 해체와 함께 동남연해 지역으로의 이전이 빨라지고 있으며, 칭따오·옌타이 등 산둥성 지역은 조선족의 새로운 거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한편 동북지역 거주 조선족에게는 2002년 8월 이후 조선족의 역사는 소수민족의 역사라는 역사관, 조선족은 다양한 민족 속에서 살고 있다는 민족관, 조선족의 조국은 중국이라는 조국관 등 삼관(三觀)정책을 실시하면서 정체성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연합뉴스 03/09/19) ²⁶⁾ 특히 조선족의 한국취업을 계기로 한국식 문화에 적응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으며, 한류 등의 영향으로 중국 내에서 한국어 배우기의 열풍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한중수교 이전 조선족 2,3세대들이 지속적으로 중국에 동화되는 경향을 반전시키게 되었고 중국으로서는 이를 중국국민으로서의 정체성 위기라고 판단하였다. 실제로 한국 내에서 진행된 조선족의 국적회복운동이나 재외동포법안에 대해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25) 지안시의 경우 북한접경 200여km에 155개 초소를 최근 설치하여 탈북자 문제 등 국경관리를 강화하였다. (목격자 인터뷰. 04/11/09 ; 서울)

26) 이것은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조선족들이 중국에서 분리를 시도하면서 과거 고려 영토를 한국의 일부로 요구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추론까지 나타나고 있다(Time 04/08/17) 이것은 조선족 정체성의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들이다.

3. 북한급변사태에 대한 대응

동북지역 변경안정의 차원에서 북한변수를 주목하게 된 계기는 1990년 중반 북한위기였다. 이 위기는 단순한 북한정권의 위기 뿐 아니라 북중관계의 성격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1995년 12월,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 9·5연구조직계획>에서 처음으로 티벳분리주의, 윈난-광시지역의 마약문제, 남사군도(Spratly island)의 영유권 문제 등과 더불어 국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강문제의 일환으로 동북변경이 연구과제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동북변강 문제가 기본적으로 정치문제’(全哲洙 2003, 9)라는 견해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동북의 역사와 민족문제를 정치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기 시작했다. 1996년 시작된 변강센터의 고구려사 연구, 1997년 지린성 사회과학원의 고구려연구중심 설립²⁷⁾, 1999년 변강센터와 동북사범대학이 주축이 되어 동북공작기구를 만든 것은 이러한 작업의 일환이었다. 이것은 지방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진행되어왔던 사업들이 중앙정부의 체계적 지원 속을 통해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동북지방에 존재했던 모든 역사와 민족을 중국사와 중국민족으로 해석하려는 작업이 이루어지기 시작되면서 고구려사를 둘러싼 역사해석의 차이를 현실의 문제로 끌어 내렸다.

동북공정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한반도 상황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특히 북한 핵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후 한반도 상황에 대한 예방적 연구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졌다. 특히 중국은 잘 조직된 한국의 민족주의운동이 만주를 향한 남한지향적

27) 지린성 사회과학원은 연구소(research institutes)와 연구센터와 훈련중심(research center and training department)에 각각 고구려연구소와 지린성 고구려연구중심이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 '대한민족권'이라는 지역 경제블럭에 포섭시킬 것을 우려하였다. 그러나 동북공정이 유사시 북한을 점수하여 친중정권을 세운 후 북한 땅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다는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다.²⁸⁾ 중국은 한반도 상황변화를 예의 주시해왔고 한반도의 현상(status quo)을 유지하는 전략을 유지해왔으나, 이것이 한반도 정책수정을 염두에 두고 고도로 기획된 동북공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중국의 한반도 정책변화와 동북공정은 상황적인 유사성이 발견되고 있다. 즉 중국이 북한붕괴 이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고구려사를 왜곡하고 심지어 신라지역까지의 연고권을 주장하며, 향후 다텈의 여지를 만들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 한반도 관리방식이나 북한체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변화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국내적 문제와 타이완 문제 등 대국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대체적으로 방어적 현실주의 노선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것은 동북지역이나 한반도 정책에서도 대체적으로 관철되어왔다. 중국은 북한붕괴에 따른 친중정권의 수립보다는 북한의 전략적 방벽을 통해 분단된 한반도를 관리하는 것이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시기에 집권한 후진타오의 적극적 대북관계 개선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이희옥 2004)²⁹⁾ 오히려 중국은 중립화를 통해 강대국 사이의 다자안보협력의 틀을 구축하여 대국간의 조정자의 역할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립화 구상이 중국의

28) 이것은 '북한위기론'을 확산하면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중국이 북한을 공격하여 과도정권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다(Gilley 2004).

29) 이러한 북중관계의 변화는 중국기업의 대북한 투자로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희옥 2006)참고.

동북의 안전에 유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唐世平 2003, 114). 왜냐하면 통일한국의 출현은 한반도의 민족주의가 고양될 것이고, 이것은 중국 국경 내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이 영토문제를 제기하면서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Korean Times* 01/11/31).

이런 점에서 동북공정은 근본적으로 간도 등 한반도와의 국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보다 직접적인 관심과 이해가 걸려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예방적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이미 1995년 리펑 총리는 한국의 총리에게 간도문제 등 고토회복을 주장하는 ‘다물운동’에 대한 주의를 환기한 바 있다(『한겨레신문』04/08/24). 또한 한국과 북한의 간도연구가 북방 영토와 국경문제에 대한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역사강역 귀속 이론과 그것에 기초한 북한의 『조선전사』의 역사기술방식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焦潤明 2003. 30)³⁰⁾ 고구려사가 불거진 이후 한국을 방문하여 구두양해사항을 협의했던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도 한국이 간도문제를 내부적으로 거론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영토문제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 바 있다.³¹⁾ 실제로 한국국회에서도 간도문제를 고구려사 해법과 연계하여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가 하면 간도협약 자체가 무효라는 결의를 국회에 제출³²⁾하는 것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30) 실제로 순진지는 고구려사에 관한 논쟁은 북한학자들에게 먼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979년 북한에서 출간된 『조선전사』를 문제 삼고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고토회복과 같은 과도한 민족주의 의식, 북한의 고구려유적의 유네스코 등재와 같은 요소들도 중국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孫進己 2003. 255-256).

31) 한국정부 외교관계자 인터뷰 (05/10/09 : 서울)

32) 김원웅 의원들은 한중간 외교마찰을 우려하는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59명의 서명을 받아 “동북공정을 통한 중국의 역사왜곡 시도는 단순히 고구려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땅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고착화하려는 숨은 의도도 내포하고 있다”며 “국회가 중국의 역사왜곡을 계기로 간도협약의

중국은 최근 간도문제에 대해서는 비타협적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고구려사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를 남겨두는 이중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간도문제는 백두산 정계비에 기록된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두만강(Tumen River)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다. 그러나 간도문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각국이 유리한 증거를 채집한 상황에서 이를 영토적 주권회복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대화창구 자체를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김우준 외 2004, 205-207) 뿐만 아니라, 1962년 북한의 김일성과 중국의 저우언라이가 국경조약(朝中邊境條約)을 맺고 1964년에는 박성철과 천이가 의정서를 교환하면서 백두산 천지의 영유권(북한 54.5% 중국 45.5%)과 두만강을 확정했다.³³⁾ 북한을 배제한 문제제기는 북한의 자존심을 자극할 뿐 아니라, 조중간 국경조약을 무시하고 간도문제를 제기할 경우 북중변경 조약의 계승을 불가능하게 하여 기존의 국경선 자체의 불안정정성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IV. 평가: 사실과 해석

동북공정 문제를 대처하는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사려 깊은 분석을 통해 역사의식을 고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추구하면서 세련된 공론의 장을 구축하는 데 실패해 왔다. 따라서 중국의 역사왜곡의 논리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사실과 해석, 정치와 학술, 역사와 영토

무효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결의안을 제출했다.(『동아일보』 04/09/04)

33) 국경조약과 의정서 전문은 (이종석 2002, 318-343) 참조.

등의 복잡한 관계를 과도하게 단순화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부정확한 정보와 해석의 과잉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사실과 해석 사이에 균형을 추구하면서 객관적 실체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³⁴⁾

첫째, 동북공정의 정치성에 대한 논란이다. 동북공정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의도는 명백하다. 그러나 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국무원 산하연구소를 통해 권력핵심이 정교하게 기획한 시나리오인가 하는 점에서는 몇 가지 부가적 설명이 필요하다. 이 논리는 동북공정을 주관한 변강사지 연구소가 속한 중국사회과학원이 국무원 소속이고 후진타오 당시 국가부주석이 이 사업을 비준했으며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 연구프로젝트가 국가의 역사서술방침이라는 가이드라인이나 비준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은 여전히 부족하고, 당의 이론과 선전라인을 관장하던 당시 후진타오 부주석도 적극적 기획자라기보다는 최종 결재 라인에 있었다는 것이 정치적 사실에 가깝다. 막대한 비용도 유적지 주변의 도시계획까지 포함한 것으로 실제로 중국 측이 주장하는 1500만 위안(25억원) 수준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중국정부의 한반도 고대사에 대한 관심은 방치해 두었던 동북지역의 역사에 대한 한국의 반응이 예상롭지 않게 나타나고, 1995년 북핵위기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방어와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던 계기적 측면도 있었다.³⁵⁾ 변강사지 연구센터가 동북공정을 하게 된

34) 동북공정에 대한 영문표기에 대해서도 한국학계에서는 한때 China's Northeast Asia Project라고 표기하기도 했으나 China's Northeast Project로 정리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공식영문명칭은 The Research Project of Northeastern China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표현은 보다 지역연구 프로젝트라는 성격을 강조한 것이고 한국측에서는 보다 넓은 의미로 동북공정을 해석한다고 할 수 있다.

35) 1996년 중국사회과학원이 추진한 동북지역변경지역 문제에 대한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이 일환으로 작성된 <한반도와 정세변화와 동북지역의 안정문제>에 관한 세 차례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동북변경 지역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2000년 <동북변강의 민족역사와 현황연구의 전개>에 대한 중앙의 동의를 얻은 후

목적에서도 이러한 견해가 나타난다.

동북아의 정치 경제적 지위가 상승함에 따라 동북지역은 동북아의 중심 지역으로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일부 국가의 연구기구와 학자들이 역사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정객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잘못된 이론을 공개적으로 선전하여 혼란을 조성하여 동북변강역사와 현상연구는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것이 동북변강 역사와 현상에 대한 학술 연구에 일련의 새로운 과제를 제공하였다³⁶⁾

다시 말해서, 중국은 한국과 북한의 역사 연구가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이 현실의 위기에 편승하여 현실정치의 문제로 비화되는 것에 대비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것은 영토와 국경 문제가 현실정치의 문제로 전화될 수 있는 역사적 유산이 남아 있다는 전제하에 역사 문제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에 들어 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북한붕괴와 같은 한반도 유사시에 영토주장을 위한 이론적 준비의 결과라는 점인가 하는 점이다. 이 근거로 동북공정 응용사업에 <한반도 통일 과정 및 그것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지적한다. 그러나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는 한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의 관심사이고 ‘작전계획’등을 통해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³⁷⁾ 그러나 동북공정이 이러한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할 수는 있으나, 이 문제

에 진행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전병곤 2006, 362-363)

36) <http://www.chinaborderland.com/cn/company/create/page024.htm?siteid=1&lmid>
(검색일: 2006.5.4)

37) 동북공정에서 한반도 정세를 다루는 것은 ‘응용연구’이고 여기에는 조선족문제, 탈북자문제 등 12개 과제가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수준을 검토할 때, 핵심적인 정책연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를 직접적인 목표로 삼고 추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북한의 급변사태(implosion 또는 explosion)에 대한 연구관심은 북한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본격화되었다.³⁸⁾ 그리고 중국이 이 프로젝트를 한반도 유사시를 염두에 둔 정치적 프로젝트라면 당정 핵심이 주관하고 주관단위도 국방부나 중앙당고 등에서 비공개적으로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역사 그 자체 보다는 변경 안정화 작업의 일환으로 이 문제에 접근했기 때문에 중국사회과학원 산하의 세계사연구소나 역사연구소가 아니라 변경사지연구센터가 주관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해석이 ‘국가통일, 민족단결, 변경의 안정’이라는 동북공정의 내밀한 정치적 의도 자체를 누락시켜야 한다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셋째, 계기적 요인이다. 1992년 수교 이후 중국여행이 자유화되면서 동북지역과 백두산을 여행하면서 한국인이 공공연히 ‘고토회복’ 문제를 제기한 것은 영토에 관해 비타협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중국을 자극하였다. 2001년 만주를 한국영토로 회복하려고 했던 다물운동 등 한국 민간단체의 움직임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처럼 역사주권의 차원을 넘어 국가주권, 영토주권의 차원으로 확장되면서 중국의 지방정부와 지방당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예의 주시해왔다.³⁹⁾ 또한 2001년 북한이 고구려 벽화고분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한 것이 직접적으로 중국을 크게 자극하였다. 중국은 기존의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다양한 문물복원 작업을 벌이는 한편

38) 북한급변사태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주도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주한미군이 3.8선을 넘는 문제, 북한체제의 관리방식, 탈북난민에 대한 처리 등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협력적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 연세 인터뷰 국방부 고위관료 S, 당 주요간부 W, 전직주요국 대사 D (서울 4월 23-24일)

39) 이러한 우려는 “몇몇 정객이 정치적 목적으로 여러 가지 잘못된 논리를 공개적으로 펼치면서 혼란을 초래한다”는 주장으로 나타났다. www.chinaborderland.com (검색일 2004. 9.20)

국제적 노력을 기울인 끝에, 북한 내 고구려유적이 단독으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을 막았고, 2002년 중국내 고구려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2004년 7월 1일 쑤저우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WHC) 28차 연차회의에서 중국과 북한의 고구려유적을 동시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넷째, 중국내부의 학술연구조직의 문제이다. 우선 중국 학술계 내에 나타나고 있는 엘리트의 대통일 천하관념과 국민국가와의 부합성을 통일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동안 북중 우호관계를 고려하여 고대 동북사 연구에서 의도적으로 금기를 풀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⁴⁰⁾ 또한 1980년대 이래 정리된 내부적 정리를 공개화 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또한 변강사지연구센터와 고구려 연구자들 사이의 프로젝트 확대를 통해 부문적 이익을 경쟁적으로 확보하려는 측면도 있었다. 특히 동북지방에 소외되어 있던 변경지역 연구자들이 정치적 목적과 공명심 그리고 자가발전의 측면이 강했다. 즉 동북공정의 의제확대가 중국사회과학원과 변강센터 및 동북지역 연구기관의 부문이익을 관철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외문제에 관련된 프로젝트는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과대 해석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부문이익을 위해 추진주체들이 의도적으로 정치화(즉, 역사 문제의 과도한 현실 정치적 해석)하자 중앙이 이를 추인하면서 증폭된 측면이 있다.

다섯째, 향후의 전개방식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동북공정의 결과가 역사교과서에 반영하여 청소년의 정치사회화 교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최근 중국의 중고등학교 실

40) 장웨이둥은 한국의 고구려사 연구가 일본의 동양사연구의 영향을 받았으며, 한국의 고구려사연구가 국내정치에 복무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姜維東 2003, 155-157, 160).

협용 교과서에서 한국 고대사를 통째로 누락하고 동북공정의 역사물을 정식 교과서에 반영할 것이며, 중국의 한반도 북부정영이 보다 본격화될 것이라는 견해도 이러한 사례의 하나이다. 그러나 동북공정의 결과물은 중국학계의 보편적 역사인식을 수용한 것이 아니다. 2006년 10월 이후 출간되는 한국고대사 관련 서적에서는 여전히 고구려가 한국사에 속한다는 견해가 적시되어 있다⁴¹⁾. 또한 2006년 5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오류시정을 요구하였고 2006년 가을학기용 중학교『세계역사』9학년 책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기술되어 있다. 다시 말해 2004년 이후 한국 측의 요구에 따라 중국이 고대사 왜곡사례를 수정해 오고 있거나, 일부 실험용 교과서에 한국의 요구를 반영한 사례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고대사를 교과서에서 누락시킨 것도 APEC 등 중국현대사의 서술비중을 늘리고 중국사와 세계사를 통합하고 이를 분류사의 방법을 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라는 점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동북공정의 한국고대사 관련 연구결과들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반영된다는 것은 한중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몰고 간다는 점에서 중국이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보다 크다. 또한 동북사지를 중심으로 동북공정의 후속결과를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은 타당성이 존재하고 있고⁴²⁾ 실제로 동북사지연구 총서가

41) 2007년 5월 한중양국에서 『列國志』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즉 중국사회과학원 문헌출판사가 2005년 11월에 『열국지』 한국편에서는 고조선과 고구려사를 한국사로 기술하였다. 이를 둘러싸고 개인적인 학문적 견해라는 시각과 중국정부의 입장과는 동떨어진 것이라는 견해가 대립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董向榮 2005; 汪高鑫 外 2006, 11-51)

42) 예컨대 서길수 교수는 '중국 동북공정 5년의 성과와 전망'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특히 지린성 사회과학원이 출판하고 있는 『東北史地』를 주목하고 "동북공정에서는 고구려와 관련해 5편의 연구과제가 채택된 것에 반해 '동북사지'는 20배가 넘는 106편의 논문을 실었다"고 밝히고 "고조선 관계 논문이 한 학술지에 3년간 9편이나 실린

지린성 인민출판사에서 출판하고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센터가 지도하고 지린성 사회과학원 기획영도소조 판공실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문화유산이 지린성에 집중되어 있고 문헌연구와 유물연구를 결합할 필요가 있어 학문적 책임을 학자 스스로가 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文責自負)'는 측면도 동시에 존재한다.⁴³⁾

IV. 결론: 비판의 방식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하려는 시도는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경에 과거 ‘중국’이라는 장구한 역사를 강제로 편입하는 빈곤한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이미 ‘정치화된 역사문제’를 접근할 때에는, 이러한 역사왜곡이 중앙에서 정교한 의도를 가지고 주도하고 있는가?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의 중앙의 의도와 목표는 무엇인가? 또한 중앙이 개입했다는 수준이 지나는 의미는 무엇이며,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점을 구체적 사실과 중국적 맥락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 평가에 따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정책이 결정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동북공정이 핵이후 한반도 영토문제까지를 염두에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않은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동북공정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전문가위원회 위원인 장푸유(長福有)가 『東北史地』 편집위원회 주임으로 취임한 점을 들며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비판의 시선이 쏠려있는 사이 『東北史地』를 통해 우회연구를 해왔음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길수, 2006)

43) 이에 대해서는 『東北史地研究叢書』 시리즈의 공통서문을 참고할 것. (劉桓 姜維東, 2006, 출판설명) 동북사지 연구총서의 주임은 전문가위원회 위원인 장푸유(長福有)와 지린성 사회과학원 원장인 빙정(溟正)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둔 고도의 정치적 기획이라면, 한국은 국가적 에너지를 여기에 쏟고 주변 국제관계를 다시 설정해야하는 것이고 여기에 절충주의적 접근이 개입될 여지는 크게 없다. 그러나 중국이 동북진흥의 일환으로 동북변경에 대한 역사연구를 하기 시작한 점을 고려하고 새로운 상황변화에 따라 국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어적 측면’이 있으며, 고구려사 왜곡의 문제는 중앙의 치밀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지방 역사학자들의 주장을 중앙이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측면도 있다면, 외교적 대응방식도 재발방지와 중앙의 지방기구 통제와 역사왜곡의 교과서 반영을 방지하는 현실적 접근이 유효할 것이다. 왜냐하면 특히 역사문제는 양국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하지만 양국관계가 나빠질 때마다 이 문제가 표면위로 등장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동북공정에 대한 문제제기 방식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함축해준다.

첫째, 우선 중국의 고구려사, 발해사에 대한 중국의 역사인식 빈곤을 문제 삼아야 한다. 중국은 풍요롭고 화려했던 중국역사를 오늘의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근대국가의 틀로 묶어내려는 ‘비역사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중국은 55개의 소수민족이 있고 14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여전히 미완의 국민국가로 남아있다는 조급성 때문에 오늘의 중국영토 안에 있는 모든 역사는 모두 중국의 역사,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더구나 ‘하나의 역사는 두 가지로 사용될 수 있다(一史兩用)’는 초기의 유연한 입장마저 거두어들인 상태이다.

둘째, 구체적으로는 중국 교육부에서 제정한 교과서 서술지침인 <역사과정표준>을 바꾸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역사과정표준>은 중국의 교과서를 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침이다. 동아시아 고대사가 중국 세계사 교과서에서 자취를 감춘 이유도 이 때문

이다. 2001년 <역사과정표준>에서 이미 한국사 관련내용을 수정하였고 2004년 가을학기용 실험용 교과서에도 근대 이전의 한국사 내용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역사과정표준>을 수정하지 않는 한 중국의 세계사 교과서에 한국사가 들어설 여지가 없다. 심지어 실험용 교과서에는 한국을 중국을 번속국(藩屬國)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래지향적 역사서술이라기 보다는 복고적인 인식이다. 동북공정이 한시적 사업이고 일부 중국역사학계의 인식의 빈곤을 드러낸 것이라면, <역사과정표준>은 미래세대를 정치사회화하는 과정에서 역사왜곡을 구조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셋째, 영토와 역사문제를 분리해 보는 방법이다. 지난 2004년, 고구려사 문제에 대한 강력한 외교적·정치적 압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에 고무되어 이를 간도문제나 백두산의 영토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더구나 북한의 침묵 속에 전개되는 이러한 문제제기는 ‘주권이 인권에 우선한다’는 중국의 외교노선과 마찰할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한중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몰고 갈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의 시민사회는 고구려사가 한국의 민족정체성과 관련된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한편, 이를 영토문제와 분리해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국 시민사회의 문제제기가 중국에게 이 사안의 민감성을 환기시키는 데 유효하다는 것은 물론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장백산’을 세계문화유산과 세계지질유산에 등재시키고 2012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등 백두산을 관광벨트화 하는 것에 대한 한국의 반응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 내부에 과도하게 내면화된 민족주의를 풀어내고 역사연구의 조건을 혁신하는 일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형질적·문화적 연속성을 근거로 고구려사를 한국사의 일부로 보는 경향도

있었고, 이를 통해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하는 관점이 투영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중국사를 왕조반복사로 기술하고 있는 데 이것은 또 하나의 오리엔탈리즘일 수 있다.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한국고대사 문제를 둘러싼 학문적 토론에서 우리 역사학계가 일방적인 우위에 서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주요한 고대사 관련 유적이 중국지역에 있고, 한국학이나 고대사 영역의 학문후속세대가 질식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고대사 논쟁에서 한국학계가 중국인 연구자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스스로의 고대사의 체계를 세워나가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따라서 왜곡된 역사를 학문을 통해서 바르게 규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다섯째, 연구담론을 동아시아 지평으로 확장하는 문제이다. 사실 동아시아 공동체가 어려운 이유는 국가를 넘어 지역을 상상하는 인식이 부족하였다. 즉 동아시아 각국의 '국민'으로 살면서도 아시아인(Homo Asiaticus)으로 스스로의 이중 정체성을 규정해 본적이 별로 없었다. (李熙玉 2006, 10) 오히려 압암리에 스며든 종족적 민족주의의 과잉이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났다. 따라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이나 중국의 개발민족주의의 유혹도 문제이지만, 우리사회에서 형성된 동원적 민족주의 과잉도 성찰적으로 진단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편찬한 『미래를 여는 역사』(東亞三國의近現代史共同編寫委員會 2005)를 고대사 영역까지 확장하는 초보적 시도가 의미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관계의 차원에서 보면 외교는 승자독식의 규칙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중국이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진흥(振興東北)’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동아시아 힘의 결절점이라는 중국 동북지역

에 착안하는 일이다. 그리고 중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국내적 갈등관리에 주력해야 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도 ‘중국위협론’을 불식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러한 중국의 역사인식에 기초한 ‘평화부상’과 ‘평화발전’ 노선이 한반도에서 수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는 한편 ‘책임대국’으로서의 품위와 격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우준·김예경. 2004. "중국의 대내외 전략과 동북공정."『세계지역연구논총』22집2호.
- 서길수. 2006. "중국 동북공정 5년의 성과와 전망."『중국 동북공정 5년의 성과와 전망』발표자료집
- 신형식. 2003. "중국의 동북공정의 허실."『백산학보』 67.
- 윤명철. 2004. 『역사전쟁』. 파주: 안그라픽스.
- 이종석. 2002. 『북한-중국관계:1945-2000』. 서울: 중심
- 이희옥. 2004a. "동북아 시민사회 교류와 공동체적 지역통합." 한국동북아 지식인연대 편.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서울: 동아일보사
- _____. 2004b. "한반도 문제와 중국역할: 의미와 한계."『한국과 국제정치』 여름.
- _____. 2005a. "중국의 국가전략: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중심으로."『한국과 국제정치』 21(1).
- _____. 2005b. "중국지속성장의 한계: 정치사회적 병목을 중심으로."『한국사회과학』 27(1,2)
- _____. 2005c. "중국의 동북공정의 논리와 추천체제." 이개석 외. 『동북공정과 중화주의』. 서울: 고구려연구재단.
- _____. 2006. "중국의 대북한 정책의 함의: 동북4성론논란을 포함하여."『현대중국연구』8(1).
- 전병곤. 2006. "중국 동북공정의 정치적 함의."『중국연구』 38권

- 정환우. 2006. “동북3성 지역의 발전여건과 '동북진흥정책.’” 『중국연구』 38권
- 정배전(이희옥 역). 2007. 『중국 평화부상의 새로운 길』. 오산: 한신대 출판부.
- 姜維東. 2003. “高句麗研究的若干問題.” 馬大正 主編. 『中國東北邊疆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劉桓、姜維東. 2006. 『唐征高句麗史』.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 寧一、冬寧. 2004. 『東北昨整』. 北京: 當代世界出版社.
- 唐世平. 2003. “朝鮮半島的演變和東北亞的未來.” 『塑造中國的安全環境』.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東亞三國的近現代史共同編寫委員會. 2006. 『東亞三國的近現代史』.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董向榮. 2005. 『列國志: 韓國(KOREA)』.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孫進己(서길수 역). 2003. “고구려의 귀속문제에 관한 몇 가지 논쟁의 초점.” 『고구려연구』 15.
- 孫進己(임동석 역). 1992. 『동북민족원류』. 서울: 동문선.
- 汪高鑫 程仁桃. 2006. 『東亞三國古代關係史』. 北京: 工業大學出版社.
- 李熙玉. 2006. “東北亞歷史問題與和平合作的議題.” 『當代韓國』 秋季號.
- 全哲洙. 2003. “開展東北邊疆問題研究的幾個問題.” 馬大正 主編. 『中國東北邊疆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中國社會科學院學術委員會編. 2003. 『21世紀初中國面臨的重大理論和對策問題』. 北京: 中國社會科學文獻出版社.
- 焦潤明. 2003. “解決邊界爭議的法理原則.” 馬大正 主編. 『中國東北邊疆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郝正. 2003. “當代社會發展與中國東北社會結構的變遷.” 馬大正 主編. 『中國東北邊疆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張威威. 2004. “韓國高句麗史問題評論綜述.” 『國際資料信息』 (9.27-31)

- Chang, Maria Hsia. 2002. *Return of the Dragon: China's Wounded Nationalism*. Boulder: Westview Press.
- Evan, Medeiros S. and Fravel, Taylor M. 2003. “China's New Diplomacy.” *Foreign Affairs*, 82(6) (Nov./Dec.)
- Gilley, Brce, 2004. China Should Invade North Korea, *Asian Wall*

Street Journal.

- International Crisis Group. 2006. "China and North Korea: Comrades forever?" *International Crisis Group Asian Report* No.112 (1 Feb).
- Kim, Samuel S. and Lee, Tai hwan. 2003. "Chinese-North Korean Relations: Managing Asymmetrical Interdependence." Kim, S. Samuel and Lee, Tai hwan. eds., *North Korea and Northeast Asia*.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Lee, Heeok. 2005. "China's Northeast Project and South Korean-Chinese Relations." *Korea Journal* 45(2) (Summer).
- Lee, Heeok. 2006. "China's Northeast Project: Political Backgrounds and Implications." *East Asian Review* Vol 18. No.4 (Winter)
- Peng, Yuan. 2004, "U.S-China Relations: Two Possibilities, One Option," *Brookings Northeast Asia Survey 2003-2004*.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e.
- Shambaugh, David ed. 2006. *Power Shift: China and Asia's New Dynamics*, Berkeley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him, Jae-yun. 2001. "Diplomatic Rows Feared After Court Orders Revision of Ethnic Koreans Law." *Korean Times*. (Nov. 31)
- Shutter, Robert G. 2005. *China's Rise in Asia : Promises, Prospects, and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Honolulu; Asia-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 Zacher, March W. 2001. " The Territorial Integrity Norm: International Boundaries and the Use of Force." *International Organization* 55(2) (Spring).

Christian Science Monitor

Asian Wall Street Journal.

Korean Times

Times

『연합뉴스』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동아일보』

ABSTRACT

An critical interpretation about political disputes of the Research Project of Northeastern China

Lee Heeok

Professor,

Dep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the reason for the discord between the intent and the unintended results of the RPNC. Especially this paper seeks to find a way to normalize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because the issues raised by the RPNC have already grown from academic to political and diplomatic ones.

China has been emphasizing that the history of Goguryeo was only an academic research project, to progress in the research areas of the RPNC defined as "national, racial unification and reorient stabilization." On the other hand, many Korean scholars insist that the RPNC was just an effort to promote "historical hegemony" in a systematic and organized manner by the Chinese government

Through this analysis, this paper found sensitive differences between the historical distortions and the political and territorial intent of the RPNC. Though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RPNC have been amplified beyond objective facts, it is hard to deny that China has begun adjusting to the existing realities i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RPNC.

And this paper suggests some effective strategy. First, South

Korea should tackle the weakness inherent in China's self-centered 'ahistorical' view. Second, South Korea must press the Chinese government to revise the criteria by which the contents of Chinese history textbooks are determined. Third, we also need to avoid an overly aggressive and nationalist response to China's actions. Fourth, the issue of history and the issue of territory must be approached differently. Fifth, theoretical discourse must be expanded beyond territorial boundaries. Last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remember that there is no "winner takes all" in foreign relations.

Key Words: Research Project of Northeastern China, Revitalizing Northeast China, South Korean-Chinese relations, Goguryeo history, Gando problem